

민주, 혁신·상임위원장 금주 인선... 내분 봉합될까

김태일·정근식 등 외부인사 무게 오늘 의원총회서 상임위장 결론 "2년 보장"...정청래 반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새 혁신위원장 인선과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당내 극심한 계파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사안인 만큼, 당 내분을 봉합할 수 있을지, '이재명 리더십'이 주목된다.

1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혁신위원장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해 검증 작업과 함께 의사 타진에 들어갔다.

최종 후보군이 추려지면 당 지도부는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 위원장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의원들로부터 추천 받은 혁신위원장 후보는 20명 남짓이다. 원외 인사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은경 한국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이 다수 의원들의 추천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철희 전 청와대 정부수석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해영·원혜영 전 의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후보 추천 명단에 올랐다. 현역 의원으로는 이상호·홍익표·이탄희·오영환 의원 등이 후보 명단에 올랐다. 당내에선 외부 인사 혁신위원장 임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혁신위 좌초'를 놓고 비명(비이재명)계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엄호가 맞서며 계파 간 갈등이 증폭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을 12일 의원총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총의가 모이면 13일이나 1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상임위원장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친명계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행정안전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그동안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과 관련된 의견을 의원들로부터 받아왔다. 이를 토대로 만든 선출 기준안을 박광은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보고하고, 의원들로부터 추진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선출 기준안에는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제기된 불만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총에서는 주요 당직이나 전직 장관, 전 원내대표 등이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부

상임위는 재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원장 선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 등 총 6개다. 이 중 원내지도부는 정 최고위원의 행안위원장직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에 각각 내정됐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와 한정에 전 환경부 장관은 새 기준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최고위원은 행안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1년씩 한 뒤 맞교대하는 것이 여야 합의 사항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임기 2년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명계인 박광은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견을 모았고 원내대표가 고민해서 (상임위원장) 선정 기준을 월요일에 제시할 것"이라며 "그날 기준이 만들어지면 원내지도부가 하루이틀 작업을 거쳐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 다음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환노위·교육위·행안위·복지위 등 4개 위원장에 각각 김경협·박홍근·정청래·한정에 의원을 내정하고 지난달 말 본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협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정 철회를 요구하면서 선출은 연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광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수록 본격 착수"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내년 4월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여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고한 가치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헌정질서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 민주항쟁의 성취로 탄생했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1

년 동안 검찰·경찰·감사원을 장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시민사회장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민주주의 역사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내 의견을 모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갖도록 국민투표법도 개정하겠다"며 "기본권 확대와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적 개헌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일에 맞추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지난 10일 서울 명동대성당 코스트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제3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형배, 광주 광산고 신설 주민설명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지난 9일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하남행정복지센터'에서 '(가칭)광산고 신설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2027년 구 하남초 폐교부지에 신설될 예정인 광산고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 의원은 광산구청장 때부터 광산구 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다. 구 하남초 폐교부지 고등학교 유치는 총선 공약이다.

광산고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5월26일 광주

시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 광산고 신설에 따른 예상사업비는 297억원이다. 개정 전에는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학교 설립 때만 중앙투자심사를 제외했고, 총 사업비에 용지비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 후에는 폐교 자산을 활용할 경우 총사업비에서 용지비를 제외한다.

민 의원은 "광산고 신설을 넘어 광산지역 초·중·고 과밀학급 완전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새 최고위원에 '호남·40대' 김가람 선출

"기성·청년 세대 잇는 역할할 것"

지난달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원외·호남 출신·40대' 정치인인 김가람(사진) 전 청년 대변인이 선출됐다.

김가람 신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위원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서 전체 539표 중 381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1983년생으로 호남에서 10여년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해왔다. '하몽'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한국청년회의소(한국JC) 중앙회장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을 맡았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뒤 민생119 위원,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김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출마를 권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후보 등록 직후부터 유력설

이 흘러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20·30대와 50·60대를 잇는 40대로서의 역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당이 호남 출신인 저를 선출해주신 건 전국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호남 국민"이라며 "국민의힘 출신 기초단체장이 한 명도 없다. 광주·전남은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다는 점을 잊지 않고 더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용빈,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지난 9일 찾아가는 민생 대책의 하나로 평동산단과 소촌산단을 방문해 명품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한아와 무등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의원은 "국회 전반기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기산업 발전 가능성을 보고 광주 공기산업 활성화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공기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장애의 구분 없이 장애인

도 일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가는데 작업장의 자동화·표준화 및 협동로봇 지원사업에 관심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 삼도동에 들어설 미래차산단은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생작업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노력하겠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명품강소기업으로 내실을 다져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오늘 표결

민주, 당론 안 정해... 가결 무게

여야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에 맡기겠다는 방

침이다.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표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통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돈 봉투 사건과 더불어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투자 논란까지 터진 상황에서, 이번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반대)되면 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당내에선 잇따른 논란에 따른 당 지지

율 하락과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가결 표를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번 돈 봉투 사건을 사과하고, 윤·이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앞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대표에게만 불체포특권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그간 민주당이 부결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검찰의 기획 수사' 논리도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